

우리나라 근로빈곤의 사회구조적 원인에 대한 실증 연구(1982-2004) :

거시경제, 노동시장, 분배제도가 근로자가구의 빈곤에 미친 영향의 검증

심 상 용

(가톨릭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근로빈곤을 발생·확대시키는 사회구조적 요인들을 실증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1982년부터 2004년까지의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활용했고, 거시경제 환경, 노동시장, 분배제도 등 사회구조적 요인들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성장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경제성장은 근로빈곤층 규모 변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장기에는 경제성장의 낙리효과(trickle down effect)가 존재하나 포드주의 이후에는 단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복지지출은 근로빈곤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없었다. 최근 미국식 자본주의 모델을 도입한 결과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고용의 질이 후퇴하고 근로빈곤이 확대돼 왔고, 제도 간 비정합성이 표출돼 사회경제적 지속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모델로의 전환을 모색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모델을 구현해야 한다.

주제어 : 근로빈곤, 거시경제 환경, 노동시장, 분배제도, IMF 경제위기

1. 서론

복지국가 위기 이후 최근 20여 년 동안 서구 사회에서는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의 빈곤이 주목받는 이유는, 근로자계층의 탈빈곤이 두드러졌고 전통적인 빈곤층의 빈곤이 주로 목격되던 이전 시기의 빈곤과는 달리, 근로 가능 연령 계층의 빈곤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Ritakallio, 2001).

근로빈곤의 발생은 포드주의 황금기와는 다른 포스트-포드주의 현상의 확산과 관련이 있다

(Smeeding, 2005). 복지국가의 저성장 및 성장의 질 악화, 경제의 세계화에 따른 경제개방 확대, 탈산업화 등 거시경제 환경이 포드주의 성장기와는 다르다. 노동시장 상황도 실업 확대 및 노동공급의 둔화,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화 같은 변화가 진행돼 왔다.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복지제도의 빈곤 및 불평등 완화 효과의 차이가 발생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반을 경과한 이후부터 특히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과거의 성장모델이 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한국은행, 2004; 한진희·최경수·김동석·임경목, 2002). 경제 성숙단계 진입과 포드주의 이후의 현상의 확산으로 인해, 더 이상 경제성장의 선순환의 성과에 의한 소득불평등 완화 및 빈곤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초반 이후 IMF 경제위기를 거치며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확대돼 왔다. 이는 199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것으로 알려진 근로빈곤층의 규모가 다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노대명·최승아, 2004). 그런데, 지금의 근로빈곤 확대는 경기침체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포드주의 황금기 이후의 서구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성장의 선순환이 단절돼 경제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구조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근로빈곤 문제에 대해 관심이 확대돼 왔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시간에 따른 변화의 추이나 패널 대상자들의 빈곤 지속 기간 혹은 빈곤 진입·탈출 양상의 파악, 근로빈곤가구의 특성과 빈곤과의 관계 규명, 공적 사적 이전소득의 빈곤 및 불평등 완화 효과 실증 등에 주력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사회구조적 요인과 근로빈곤의 발생·확대와의 인과 관계를 동태적으로 규명하려는 연구²⁾는 눈에 띄지 않는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근로빈곤의 사회구조적 원인에 대한 분석이다. 동태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 근로빈곤을 발생·확대시키는 사회구조적 요인들을 실증하고자 한다. 경제개발시대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주류는, 경제성장과 그 효과로 인한 탈빈곤이라는 단순 선형관계에 대한 자유주의적 신화를 여전히 믿고 있다. 본 연구는 근로빈곤의 구조적 동인과 발생구조에 대한 학문적 탐구를 증진시키고 실천적 관심을 환기하는 출발이 된다고 생각한다.

- 1)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시대 이후부터 지속된 산업화에 의한 경제성장의 결과, 취업기회가 확대되고 가구소득이 증대돼 왔다. 특히, 1980년대 중반에 주변부 포드주의 축적체계가 안정화 된 이래, 1990년대 초반까지 한국형 포드주의의 황금기를 구가해 왔다(김정식·이강복, 2001). 경제성장기의 선순환의 결과, 1990년대 초반까지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율은 1976년 18.1%, 1980년 10.43%, 1988년 1.5%, 1991년 1.1%로 감소해 왔다(이정우·황성현, 1998; Suh and Yeon, 1986).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는 경제성장의 낙리(落利)효과(trickle-down effect)에 의해, 개인은 노력 여하에 따라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자리잡아왔다.
- 2) 외국의 경우, 빈곤의 사회구조적 원인에 대한 최근 연구는 빈곤에 대한 구조적 이론(structural theories of poverty)에 기반을 둔 일국 차원의 빈곤 원인 연구(Iceland, 2003; O'Connor, 2001; Danziger and Gottschalk, 1995), 생산레짐과 복지국가 실적(performance)이 각 국가 군집(cluster)의 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사회연구(Bäckman, 2005; Brady, 2004; Moller, Bradley, Huber, Nielsen and Stephens, 2001; De Beer, Vrooman and Schut, 2001; Ritakallio, 2001)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일국 차원의 연구는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변수들을 편의적으로 선택한 한계가 있고(Brady, 2005), 비교사회연구는 내적 요인들 간의 동태적 관계를 규명해 일국 차원에서의 빈곤 발생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Plümper, Manow and Troeger, 2005; Ragin, 2002: 59).

2. 근로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요인

1) 경제성장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포드주의 내포적 축적체제의 황금기였다. 포드주의 성장과 산업화, 고용 확대, 정규직 일자리 창출은 근로자계층의 소득증가와 근로빈곤 완화로 이어지는 선순환관계를 형성했다(Norton, 2002).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신고전학과와 후기 케인즈안의 정태적인 분배모형은 노동자는 전혀 저축을 하지 않고 투자와 성장의 원동력인 저축과 자본축적이 자본가의 이윤에 의해서만 창출된다는 논리를 근거로 불평등한 소득분배를 정당화했다. 불평등한 소득분배는 이윤의 재투자로 이어지고, 경제 제량의 확충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국가들이 실제로 성장일변도의 정책을 펴지 않았고 성장과 분배가 상충적 관계에 있지도 않았다는 사실은 복지국가 황금기 동안의 노동소득 분배율의 개선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경험적으로도 입증된다(Kuznets, 1966: 168-170). 실제로는 요소소득의 기능적 가격결정에만 안주하지 않았고, 고성장과 생산성 증가에 따라 실질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집합적 소비 규범이 안정화되는 포드주의적 조절이 유지돼 왔다(Armstrong, Glyn and Harrison, 1991: 88).

전통적인 거시경제이론에서는 한 나라의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사이에는 곡선의 관계(curvilinear)에 있어, 초기 단계에서는 소득분배가 악화되다가 경제발전의 최종 단계에서는 감소한다고 주장해 왔다(Nielsen, 1994). 이는 완전고용, 노동소득분배 개선, 비교적 균질적인 포드주의적 노동시장 환경 등에 기인한 낙리효과(trickle-down effect)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the great U-turn'의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Volscho, 2004; Aghion, Caroli and Garcia-Penalosa, 1999). 이제 경제 성장은 소득분배 악화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경기순환이나 저성장만으로 소득분배 악화를 설명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Danziger and Gottshalk, 1995: 126-127). 첫째, 최근의 저성장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의 불평등 상쇄효과가 제한적인 반면, 고용 수준이 하락하고 실업이 증가해 소득분배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Blank and Blinder, 1986: 180-208). 둘째, 노동시장 유연화와 임금소득의 이산(dispersion) 수준의 확대는 소득분배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Acemoglu, 2002). 셋째, 서비스 경제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균질적이고 높은 임금 부문으로 이루어진 제조업과 높은 기술수준과 고임금, 낮은 기술수준과 저임금으로 양극화 돼 있어 불평등하고 전반적으로 질이 낮은 서비스 부문으로의 분절이 이루어짐으로써, 소득분배가 악화된다(Alderson, 1999). 넷째, 한부모가구 증가, 단독가구의 증가 등은 해당 가구의 소득 수준을 낮추고 특히 아동을 양육하는 모자가정의 빈곤에의 노출을 가중시킴으로써 소득분배를 악화시킨다(Cancian and Reed, 2001: 86-92).

오일 쇼크 이후에는 저성장이 포드주의의 독점적 조절양식의 원활한 작동을 여의치 않게 함으로써 포드주의의 위기가 나타났는데, 저성장은 포드주의 축적체제의 기반을 침해해 국가의 조절 가능성을

축소시켰다. 이처럼, 경제성장이 빈곤완화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은 1970년대 후반으로 끝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Blank, 2000: 10).

그럼, 포드주의 이후의 성장의 질 악화는 소득분배와 근로빈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경제 성숙기 이후에는 요소투입 이외에 소득변화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요인들에 대한 관심이 확대돼 왔다. 1990년대 이후의 R&D 기반 혁신 주도형 성장모형에서는, 소득증가로서의 성장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정부개입, 개방도, 산업연관관계, 수요기반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Watts and Porter, 1997). 나아가, 포스트-포드주의 환경에서는 성장의 질이 악화되면 경기가 회복돼도 경제성장이 빈곤 완화에 순 효과를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Volscho, 2004). 경제성장은 생산과 소득의 증가를 의미하는데, 특히 미국식 모델에서는 생산의 증가에 상응하는 소득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Moller et al., 2001; Tobin, 1994; Culter and Katz, 1991).

이처럼, 경제성장에만 의지해 빈곤을 제거하려는 노력은 현실정합성에서 의문이 제기된 지 오래이다(Ellwood and Summers, 1986: 79). 이는 서비스 경제화로 인한 경제성장과 제조업 간의 연계 약화 및 경제 부문 간 불균형 성장(Sonis, 1996),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화(Danziger and Gottschalk, 1995: 124-150), 저기술 저임금 수준의 하찮은 일자리 확대(Acemoglu, 2002), 정보통신산업의 발달 등 경제성장의 고용유발효과 잠식에 따른 '일자리 없는 성장'(jobless growth) 경향(Brandt, Burniaux and Duval, 2005: 7-8) 때문이다.

2) 경제의 세계화 : 경제개방

세계 포드주의(global Fordism)가 확립되자 무역자유화, 자본이동의 자유화 등 경제의 자유화 추세가 확대됐고, 그 영향으로 발달된 자본주의 국가들은 점점 더 세계시장에 통합돼 왔다(Rodric, 2000). 경제의 세계화가 국가의 경제적 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비판론에 의하면, 규제되지 않은 시장에서의 자본의 유동성 증가는 경제에 대한 국가의 조절능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경쟁국가로의 전환을 불가피하게 한다(Mishra, 1999: 79-108). 반면, 경제의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재정정책, 통화정책, 산업정책 등에 대한 국가의 조절능력은 약화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Notermans, 1995). 또, 무역의존도가 높고 개방된 경제체제를 가진 소국(小國), 이른바 강소국(強小國)들의 경우는 예외라는 주장도 있다. 세계경제의 틈새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고기술의 생산기술에 특화된 노동력과 사회적 하부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시경제에 대한 조절능력이 후퇴(constraint)하지 않았다는 것이다(Huber and Stephens, 2001: 226-227).

경제의 세계화와 사회정책의 관계에 대해서도 세 가지의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Bowles and Wagman, 1997). 첫째, '바닥으로의 경주'(race to bottom) 가설에 의하면, 외국자본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국내 제도를 효율화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정책의 전반적인 하향조정(downward harmonization)이 불가피하다. 둘째, 반면, 보상가설에 의하면 경제의 세계화는 국가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켜 경제의 유동성과 구성원들의 경제적 불안정을 확대시키기 때문에 사회적 욕구가 증가하게

되고, 국가는 첨예한 국제경쟁에서 안정적인 자본투자를 하는데 필요한 정치적 안정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사회적 지출의 확대를 피한다는 주장도 있다(Rodric, 1997). 셋째, 클럽 수렴 가설(convergence clubs hypothesis)에 의하면, 경제의 세계화에 대한 반응은 제도적 군집별로 재상품화(re-commodification), 비용절감(cost containment), 재조정(recalibration) 등 국내 제도의 경로의존성(path-dependency)에 따라 차이가 있다(Pierson, 2001: 83).

3) (탈)산업화

포드주의의 고성장과 생산성은 농업에서 제조업으로의 산업구조 변화, 즉 산업화에 힘입은 바가 컸다(Baldwin, Martin and Ottaviano, 2001). 제조업은 노동집약적인 농업에 비해 기술진보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산업화는 노동생산성 증가로 이어졌다. 그런데, 기술혁신과 유연생산체계의 확대 등 포스트-포드주의의 영향으로, 제조업에서는 노동생산성 유지와 이윤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절감의 노력이 확대돼 왔다. 이로 인해 제조업 부문은 서비스 부문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노동력을 투입해도 무방한 현상이 발생하고,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노동이동을 초래하게 된다(Rowthorn and Wells, 1987). 1960년대에 비해 1970년대 이후에는 성장률, 고용성장률 면에서 제조업의 정체 내지 후퇴와 서비스업의 확대가 두드러진다(Rowthorn and Ramaswamy, 1997). 그러나 이자율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임금의 상승은 1980년대 이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서비스 부문의 고용 확장은 그 원인 중의 하나이다(Myles and Pierson, 2001: 311).

서비스 경제화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정체(stagnant service provision)의 추세가 1970년대 이후 현저해 지고 있다(Rowthorn and Ramaswamy, 1998). 둘째, 생산성이 진보하지 않고(non-progressive)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되는 서비스 부문의 확대에 인한 균형이윤을 저하 위협을 상쇄할 정도로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경제 부문 간 불균형 성장(unbalanced growth), 제조업 생산의 해외 이동, 산업연관관계 약화 현상이 발생한다(Baumol, Blackman and Wolff, 1985). 셋째, 산업연관관계 약화는 후방연쇄효과 축소, 중간수요의 수준(level of intermediation) 하락에 따른 중간재 투입률 약화, 최종수요에 대한 제조업의 생산유발 효과 축소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불균형 확산은 경제의 저생산성, 저성장, 실업, 소득불평등 같은 부작용을 낳는다(Sonis, 1996). 넷째, 반면, 제조업 고용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에서는 눈에 띄는 고용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용성장률이 약화된다(Krugman, 1996: 212-213). 다섯째, 서비스 부문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질적인 직종과 노동형태로 이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저숙련 노동자들로 채워지는 단순서비스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불완전 고용 등 고용의 질이 낮고 임금 수준의 양극화가 현저하다(Myles and Pierson, 2001: 310-311). 여섯째, 서비스경제화로 인한 저성장과 저임금 같은 변화는 복지국가 지출에 대한 욕구를 증대시키지만, 반대로 국가의 재정수입의 확대를 여의치 않게 함으로써 재정긴축(budgetary restraint), 평등, 고용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trilemma)을 낳는다(Iversen and Wren, 1998).

4) 고용 수준

복지국가의 저성장은 불가피하게 완전고용의 종식과 실업의 확대로 이어졌다. 근로빈곤 퇴치의 가장 확실한 정책수단(most effective antipoverty policy instrument)인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의 조화와 균형이 깨져버린 것이다(Haveman and Schwabish, 1999: 18). 1960년대의 네 배, 1970년대의 두 배에 이르는 주요 선진국들의 실업률 수준은 빈곤의 확대와 유의한 관계가 있다(Atkinson, 1998: 72).

실업스톡의 변화로 노동공급구조를 규명하는 것은 실업에 따른 사회적 고통을 집약적으로 나타내 준다. 그러나 실업스톡은 비경제활동인구의 변화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구직 단념자 증가 현상 같은 실망실업자 효과(discouraged worker effect)가 반영되지 않는다. 반면 고용률은 실업률 혹은 경제활동참가율보다 근로빈곤을 설명하는데 더 유용하다. 이 관계는 변화할당분석(shift-share analysis)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Atkinson, 1998: 74-77). 한 명으로 구성된 개별 가구를 가정할 때, 전체 고용 가능 인구 중 고용가구, 실업가구, 비경제활동 가구의 몫을 각각 N_w , N_u , N_n 으로 나타내고, 특정 빈곤선 π 기준의 빈곤율 이하에서 세 유형의 가구가 차지하는 몫을 각각 $G_w(\pi)$, $G_u(\pi)$, $G_n(\pi)$ 라 하면, 전체 빈곤율에 대한 각 가구 집단의 기여는 $G_w(\pi)N_w + G_u(\pi)N_u + G_n(\pi)N_n$ 으로 나타낼 수 있다. ΔU 만큼의 고용가구가 새롭게 기존 실업가구의 소득과 같은 수준의 실업상태로 바뀌었다면, 전체 빈곤율의 변화는 $\Delta U [G_u(\pi) - G_w(\pi)]$ 로 나타낼 수 있다³⁾.

5) 노동시장의 유연성

전통적인 단일노동시장에 대한 비판과 이중노동시장에 대한 실증은 포드주의 복지국가 환경 아래에서도 제기돼 왔다(Atkinson, 1975: 104). 그렇지만 노동시장 유연성 증가는 포드주의 이후의 전형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미시적 수준에서의 동기는 소비규범의 변화, 테일러-포드주의의 노동력 저생산성 극복, 신기술의 발달에 대한 근로자 간 적응력의 차이와 이에 대한 자본의 대응으로서의 숙련노동자 보호, 자본의 이동성 증가, 임금비용 삭감을 통한 이윤율 하락 보충 등의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 요인들이다(Oman, 1994; Mathews, 1989: 108-130).

1980년대 이후 OECD 국가들에서는 정규직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 사이의 고용의 양극화(employment polarization)는 부유한 노동자(work-rich)와 가난한 노동자(work-poor) 간의 임금 격차로 이어져 근로빈곤을 낳는 강력한 요인(driving factor)이 돼 왔다(Föster and Pearson, 2002: 36). 노동력 수요 측 요인인 노동시장 구조는 근로소득의 분산(dispersion)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근로소득의 분산 수준은 근로소득(earnings)이 주요한 소득 원천인 근로자계층의 빈곤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Atkinson, 1975: 74).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빈곤에 영향을 미친다. 먼

3) 고용 가능 인구의 3/4이 고용상태에 있는 벨기에와 프랑스를 예로 들 때, ΔU 에 따른 고용률의 승수(multiply)는 4/3이므로, 고용 및 비고용 가구 집단 간의 빈곤율의 차이를 20%로 가정할 때 고용률이 1% 떨어지면 빈곤율은 0.15% 증가한다.

저, 저임금 근로자는 직접적으로 빈곤에 노출되게 된다. 또, 근로자 계층 간 임금격차 심화와 경쟁적인 저임금 확대를 낳는 공급 측과 수요 측 요인으로 작용해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도 빈곤 확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Danziger and Gottschalk, 1995: 124-150).

6) 복지제도

신고전학과 경제학은 큰 정부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논지를 전개해 왔다. 정부의 비생산적인 소비지출이 기업의 효율적인 투자를 저해해 성장잠재력을 침해한다는 것이다(Barro, 1991). 그러나 생산요소 투입형의 성장기 동안에도 포드주의 복지국가는 시장의 조절에만 의존해 사회정책을 도외시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총요소생산성(TFP : total factor productivity)의 기여를 중시하는 경제 성숙기 이후의 환경에서는 국민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공적 지출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를테면 인적 자본 형성을 위한 공적 교육투자는 성장을 촉진시킨다. 즉, 신고전학과와는 반대의 인과관계 논리(reverse causality argument)가 성립된다. 또 아쇼어(Aschauer) 가설에 의하면, 정부소비나 정부지출은 사적 자본 축적을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기초여건을 개선시킴으로써 성장에 도움이 된다(Bassanini, Scarpetta and Hemmings, 2001). 하버거(Harberger) 가설처럼, 조세지출의 크기와 성장과는 무관하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소득불평등이 크면, 인적 자본 형성을 어렵게 하고 성장잠재력을 잠식해 경제 성장에 부(否)의 영향을 미친다(Benbaou, 1996). 나아가 큰 정부가 성장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 자체가 근거가 부족하다. OECD 국가간 비교연구에서 앵글로색슨 유형의 작은 정부는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소득이 덜 불평등한 노르딕 유형의 큰 정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Pryor, 2004).

그런데 복지국가 급여가 빈곤완화에 미치는 효과는 균일하지 않다. 공적 이전소득의 빈곤 완화 효과는 국가군마다 차이가 있다. 빈곤갭으로 가중된 빈곤율(the poverty rate multiplied by poverty gap) 분석에 따르면, 공적 이전으로 인해 모든 나라에서 과세 후 이전 후 빈곤 수준은 상당히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효과는 국가마다 다르다(Kenworthy, 1999). 복지급여의 대상(targets)마다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관대성(generosity)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자산조사형 프로그램의 재분배 효과는 보편적 급여에 비해 크지 않다(Korpi & Palme, 1998). 정액급여(flat rate benefits) 또한 재분배 효과가 적다. 노동유인과 빈곤갭 억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산조사형 프로그램과 소득연계급여의 중층적 설계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3.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1) 개념정의와 지표 구성

(1) 근로빈곤층

본 연구는 통계청의 1982년부터 2004년까지 23년 간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사용했다. 현재 빈곤층의 규모를 측정할 수 있는 통계자료 중 1980년대부터 적용되는 자료는 <도시가계조사>가 유일하다.

근로빈곤층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있어서는 '빈곤가구 구성원 중에서 적어도 6개월 이상(1년 중 27주) 동안 노동시장에서 일하거나 구직활동을 수행한 사람'으로 규정한 클라인과 론스(Klein and Rones, 1989)의 정의가 근로빈곤층의 개념 정의에 가장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도시가계조사>는 통계자료의 한계 때문에 이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가 만 18세부터 65세 미만인 가구 중에서 현재 가구주가 피용자로 취업상태에 있는 가구로서, 가구소득이 빈곤선에 미달하는 가구"로 정의했다.

빈곤선 설정의 목적 중에는 빈곤계층 보호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도 있고, 빈곤층의 경우 이론적으로 소비가 소득보다 커서 실질적인 재정적 능력을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황덕순,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상소득(근로소득 + 사업소득 + 부업소득 + 재산소득 + 공·사 이전소득)을 기준 소득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는 빈곤가구 측정의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40%를 사용했다. 그 현실적인 이유는, 2000년 4인 가족 대상 최저생계비가 4인 가족 중위소득의 40%에 약간 모자라는 액수라는 점을 고려했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은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1982, 1988년의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1/3 수준에도 미달할 정도로 예측돼 현실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이정우·황성현, 1998). 가구균등화지수는 OECD 가구 균등화 지수(Atkinson, 1998)를 사용했다.

(2) 독립변수 - 사회구조적 요인

첫째, 경제성장은 공급경제주의의 기반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non-zero sum 게임의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다(DiNitto and Dye, 1995: 34-37). 본 연구에서는 GDP 성장률을 대리변수로 사용했다. 둘째, 경제개방으로 인한 교역부문과 국내부문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에 의하면, 대외무역 확대가 고용축소나 빈곤 확대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Rowthorn & Ramaswamy, 1998; Rodric, 1997; Rowthorn & Wells, 198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본자유도를 경제의 세계화를 대표하는 대리변수로 삼았다. 자본자유도를 나타내는 대리지표는 GDP 대비 FDI(foreign fixed capital formation, 외국인이 주식 인수와 함께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서 자기자본·이익잉여금·직접차관으로 구성) 비중을 사용했다(김혜선·김태일, 2004). 셋째, 일반적으로 탈산업화를 측정하는 대리

변수로는 전체 취업자 수 대비 제조업 취업자 수의 비중, 실질 GDP 대비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 총액 등을 사용한다(Rowthorn and Ramaswamy, 1998). 본 연구에서는 전체 취업자 수 대비 제조업 취업자 수를 대리변수로 삼았다. 넷째, 고용 수준에 대해, 노동시장의 상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는 실업률이 있는데, 통계작성상의 한계로 인해 현실과 괴리될 수 있다. 따라서 고용수준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고용률을 대리변수로 삼고, 취업자 수/15세 이상 인구로 측정했다. 다섯째, 노동시장 유연화의 주요 지표로 비정규직의 확대를 채택했다. 자료의 특성을 감안해 전체 피용인 중 임시·일용직의 비율을 대리변수로 삼았다. 여섯째, 분배제도 변수로서의 복지제도의 수준은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로 측정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OECD 기준 중 공공사회복지지출(일반정부지출+사회보험급여)만을 사회복지지출이라 규정하기로 했다. 이를 경상GDP에 대비해 국민부담률을 설정했다. 일반회계 세출기능별 규모 추이 중 교육비를 제외한 사회개발비 지출 규모를 사회복지지출로 채택했다.

포드주의 위기와 경제 성숙단계 진입을 함축하는 IMF 경제위기 변수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에 주변부 포드주의 축적체계가 안정화된 이래 1990년대 초반까지 한국형 주변부 포드주의의 황금기를 구가해 왔다. 그런데, 1990년대 초반 이후,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부터는 다른 양상이 전개됐다. 오일 쇼크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겪었던 대량생산체계의 생산성 하락, 양적 성장의 한계 도달, 경제양극화 같은 경제 성숙단계의 징후를 겪었고 포드주의 축적체계의 동요와 위기가 확산돼 온 것이다⁴⁾. 본 연구에서는 IMF 경제위기를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경제구조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로 간주했고, IMF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가 근로빈곤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해 보고자 했다. 이에 따라, 한국형 포드주의의 위기와 포드주의 이후의 경제성숙단계 진입의 계기로서 IMF 경제위기를 더미변수화 해 1982-1997년을 0, 1998-2004년을 1로 투입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변수들과 대리지표는 <표 1>과 같다.

4) 생산함수접근법을 통한 잠재성장률 추이 분석에 의하면 한국경제의 성장회계는 1990년대 이후 구조적으로 변화해 중요요소생산성(TFP)의 기여도가 증가하고 중요소투입의 기여도가 감소해 왔다(한진희 외, 2002). 한편,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경제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한국은행, 2004).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제조업과 서비스업, IT 분야와 비 IT 분야, 고용 및 임금구조의 양극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현상이자 본질적으로 산업구조 변화 과정의 하나이다(김인철·민성환, 2003). 이에 따라 자본·임노동관계에서의 노동의 유연화를 기조로 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유연적 축적체제로의 재편이 진행돼 왔다(김정식·이강복, 2001). 자세한 내용은 심상용(2005)을 참고하라.

〈표 1〉 변수에 대한 개념정의 및 지표구성

변 수		조작적 정의 및 대리지표	출 처
종속 변수	근로빈곤 가구의 규모	가구주가 만 18세부터 65세 미만인 가구 중에서 현재 가구주가 피용자로 취업상태에 있는 가구로서, 가구소득이 빈곤선에 미달하는 가구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로 측정, 1982년부터 2004년
	빈곤선	경상소득 기준(중위소득의 40%), OECD 가구균등화 지수 사용,	
독립 변수	경제성장	경제성장률(GDP 성장률)	한국은행 <국민계정>
	경제의 세계화	자본자유도(FDI/GDP)	
	(탈)산업화	제조업 고용 비중(제조업 취업자 수/전체 취업자 수)	통계청 <KOISIS>
	고용 수준	고용률(취업자수/15세 이상 인구)	통계청 <KOIST>에서 계산
	노동시장 유연화	임시·일용직 비중 (임시·일용직/전체 피용인)	통계청 <KOIST>, 경제활동인구연보, 김유선(2005) 원자료
	복지제도	국민부담률(공공복지지출/GDP)	<2004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IMF 경제위기 : 포드주의 위기와 경제성숙단계 진입	1982 - 1997년 ⇒ 0, 1998 - 2004년 ⇒ 1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런데, 거시 시계열자료를 활용한 회귀분석은 독립 및 종속변수 간 차수 조정과 분산 안정화 변환 등 변수오차현상에 대한 통계적 고려와 함께 자기회귀, 다중공선성, 이분산성에 대한 검토 및 처치⁵⁾가 필요하다.

분석절차는 위의 〈표 2〉에 정리된 바와 같다. 먼저, 회귀식의 변수오차(errors-in-variables) 현상을 통제하기 위해 독립변수가 1년의 시차를 두고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 단위근이 존재하는 불안정 시계열로 인한 회귀식의 가성적 관계(spurious relationship)의 현상의 발생이 관측될 때 2년 시차 모형이 고려된다(이종원·이상돈, 1996: 159-160).

둘째, 회귀모형의 공적분 관계와 선형성 가정 충족 여부를 검토했다. 회귀식의 기본 가정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지수모형, 역함수모형, Box-Cox 변환 등 분산안정화 변환을 통해 적절한 모형을 선택하도록 권고된다(김연형, 2001: 158-160).

5)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에서는 LSM 혹은 OLS의 회귀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관찰과 시간 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오차의 자기회귀(temporal autocorrelation) 경향, 시간의 변화에 따른 오차의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 잔차들의 상관성(cross-sectional correlation), 오차의 시간과 공간에 따른 인과적 이질성(causal heterogeneity) 등 때문이다(Hicks, 1994: 172). 이는 시계열 종단(time-series cross-section) 분석에서 자료가 시간적 속성(temporal properties)을 갖기 때문이다(Beck & Katz, 1995: 645).

〈표 2〉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내 용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다중회귀분석	변수오차현상 통제(차수 조정)
	공적분 관계와 선형성 가정 확인(분산안정화 변환 검토)
	자기회귀 검토(Dubin-Watson 검정 및 LM 검정)
	자기회귀 처치(GLS 방법, 제1차계법, 오차수정모형)
	다중공선성 검토(분산팽창계수 및 상태지수)
	다중공선성 제거(변수 표준화 방법)
	이분산 검정(산점도 분석 및 White의 이분산 검정법)
	이분산성 처치(가중최소제곱법)

셋째, 회귀모형의 자기회귀, 혹은 계열상관 현상을 통계적으로 검토, 처치했다. 자기회귀 현상에 대한 통계적 검토에는 더빈-왓슨(Dubin-Watson) 값과 LM(Lagrange Multiplier) 검정법을 함께 사용했다(남준우·이한식, 2002: 218-222). 회귀모형의 회귀방정식을 OLS로 추정하되, 모수절약의 원칙에 따라 AR(0) 모형, 즉 확률과정이 1차(first order) 정상적이어서 1차원 분포함수가 시점에 관계없이 불변인 $\hat{\epsilon} \sim I(0)$ 의 정상시계열 과정부터 적용했다. 단위근이 존재해 적분의 차수가 다르더라도, 공적분 회귀방정식에서는 변수 간 관계에서 자기상관이 통계적으로 의미를 상실하면서 공적분 관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⁶⁾(이종원·이상돈, 1996: 1038-1039). 자기회귀현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 AR(1) 모형을 중심으로 GLS(generalized OLS) 방식이나 제1차계법(the first difference method)의 적용을 검토하도록 권고된다⁷⁾(김두섭·강남준, 2000: 169-170). 나아가 장기 동태적인 조정의 특징을 갖고 있는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에 사용하는 앵글과 그레인저(Engle and Granger)의 오차수정모형(ECM)의 적용이 타당하다고 한다(이종원·이상돈, 1996: 1042-1044).

넷째, 다중공선성을 검색 및 처치했다. 독립변수의 의미는 각각의 변수를 적용했던 선행 연구와 이론에서 검증됐기 때문에 변수의 축소하거나 통합하지 않고, 표준화 방법에 의한 다중공선성 제거를 시도했다. 변수 표준화 방법은 변수들 간의 다중상관을 변화시키지 않은 채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부정확한 계산의 문제를 상당히 완화시켜 준다는 장점이 있다(김두섭·강남준, 2000: 225-228).

다섯째, 이분산성을 검정 및 처치했다. 전체 회귀모형에 대한 이분산성 검정에는 잔차의 제곱(e_i^2)과 종속변수에 대한 산점도 분석과 화이트(White)의 이분산 검정법을 사용했다(남준우·이한식, 2002: 204-206). 이분산성을 통제하기 위해 가중최소제곱(WLS, weighted least squares) 방식을 적용했다. WLS 방식은 잔차의 분포형태를 고려해 회귀계수를 산출하는 방식⁸⁾이다(남준우·이한식,

6) 경우에 따라서 $I(0)$, $I(1)$, $I(2)$ 변수들이 혼재된 상태에서의 회귀분석이 있을 수 있는데, 종속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를 차분해 $I(0)$ 변수를 만들어 회귀분석을 해야 한다면 모형의 설정 상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측정결과의 해석에도 무리가 있을 수 있다.

7) 일반적으로 자기상관계수(ρ)의 값이 0.3 이상이면 OLS 방식의 적용을 지양하고 GLS 방식을 적용할 것이 권장되고, 자기상관계수의 값이 1에 가깝다는 심증이 있을 때 제1차계법을 적용한다.

2002: 206-209).

4. 분석 결과

1) 변수 측정 결과

연도별 근로빈곤가구의 규모를 측정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근로빈곤가구의 규모(1982-2004)

	가 구 소 득 ¹⁾			빈곤선(원)	중위소득 40% 기준 빈곤율 (근로빈곤가구/표본근로자가구)
	평균소득(원)	중위소득(원)	표준편차		
1982	138,340	120,949	84,563	48,380	5.60 (554 / 9,890)
1983	162,650	140,000	98,345	56,000	4.81 (486 / 10,113)
1984	179,639	155,564	113,036	62,226	6.16 (605 / 9,852)
1985	191,939	166,304	121,365	66,522	6.15 (629 / 10,214)
1986	217,225	187,830	137,326	75,132	7.36 (744 / 10,110)
1987	247,560	213,620	149,305	85,448	5.90 (609 / 10,317)
1988	287,002	248,266	170,907	99,306	5.67 (598 / 10,557)
1989	343,056	296,985	204,479	118,794	4.64 (492 / 10,610)
1990	414,208	357,500	258,899	143,000	4.55 (482 / 10,600)
1991	495,615	434,363	316,181	173,745	4.64 (489 / 10,547)
1992	606,062	536,656	360,655	214,662	5.02 (528 / 10,520)
1993	673,862	586,544	391,754	234,618	3.98 (411 / 10,318)
1994	774,547	683,639	435,656	273,456	4.32 (441 / 10,214)
1995	902,629	785,601	534,079	314,240	4.56 (466 / 10,212)
1996	1,030,028	896,250	648,342	358,500	5.47 (548 / 10,014)
1997	1,123,247	987,325	677,548	394,930	4.98 (494 / 9,912)
1998	1,114,410	977,398	656,565	390,960	6.36 (605 / 9,513)
1999	1,130,571	1,001,847	690,973	400,739	5.50 (484 / 8,796)
2000	1,152,356	1,005,000	694,991	402,000	5.98 (540 / 9,031)
2001	1,279,243	1,082,188	823,334	432,875	5.39 (476 / 8,828)
2002	1,469,845	1,281,717	860,557	512,687	5.63 (497 / 8,832)
2003	1,487,209	1,304,812	924,403	521,945	6.90 (3,507 / 50,826)
2004	1,607,679	1,404,615	1,003,032	561,846	7.05 (3,507 / 49,445)

1) 가구소득은 OECD 가구 균등화 지수로 조정된 경상소득 기준임.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 연도 원자료에서 측정.

우리나라 근로빈곤가구의 빈곤율은 1986년도의 7.36%를 정점으로 감소해 1993년에는 3.98% 수준

8) 원 회귀식의 오차항의 분산을 σ^2 이라 할 때, 원 회귀식에 포함된 모든 변수를 σ_i 로 나누어주는 것인데, 이 방식을 따르면, OLS 방식에 의해 추정된 원 회귀식의 각 계수 추정치 보다 표준오차가 작게 됨으로써 계수추정치에 대한 분산의 추정치 역시 일치성을 갖게 된다.

에 이르러 최저점을 기록했다. 그 뒤 1994년 4.32%, 1995년 5.56%, 1996년 5.47%, IMF 경제위기 이후인 1998년에는 6.36%로 상승해 왔다. 2001년에는 5.39%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다시 반등돼 2003년, 6.90%, 2004년 7.05%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사회구조적 요인의 현황은 <표 4>와 같다.

<표 4> 사회구조적 변수의 현황⁹⁾(1981-2003)

연도	경제성장률 ¹⁾	자본자유도 ²⁾	제조업 고용비중	고용률 ³⁾	임시·일용 직 비중	국민부담률	노동소득 분배율 ⁴⁾	지니계수 ⁵⁾
1981	6.2	21.0	20.4	55.9	33.3	1.085	50.2	0.309
1982	7.3	25.0	21.1	56.1	31.7	1.048	51.7	0.309
1983	10.8	32.0	22.5	55.3	32.0	0.999	53.5	0.311
1984	8.1	46.1	23.2	53.7	36.7	0.956	53.5	0.311
1985	6.8	54.9	23.4	54.3	37.1	0.972	53.3	0.307
1986	10.6	32.3	24.7	54.9	46.5	1.127	52.7	0.306
1987	11.1	76.4	27.0	56.5	45.6	1.134	53.0	0.302
1988	10.6	68.1	27.7	57.0	44.5	1.009	54.4	0.304
1989	6.7	47.3	27.8	58.0	45.2	1.093	56.6	0.295
1990	9.2	30.3	27.2	58.6	45.8	1.266	58.0	0.287
1991	9.4	45.4	27.6	59.1	44.5	1.314	58.8	0.284
1992	5.9	27.3	26.2	59.4	42.6	1.260	58.7	0.281
1993	6.1	28.7	24.5	59.1	41.1	1.189	59.1	0.284
1994	8.5	31.2	24.0	60.1	42.1	1.149	59.3	0.284
1995	9.2	37.7	23.6	60.6	41.9	1.116	61.3	0.291
1996	7.0	57.4	22.7	60.8	43.2	1.221	63.4	0.283
1997	4.7	135.0	21.4	60.9	45.7	1.432	62.3	0.316
1998	-6.9	255.7	19.6	59.4	46.9	1.628	59.6	0.320
1999	9.5	349.1	19.8	56.7	51.6	1.683	58.8	0.317
2000	8.5	297.2	20.3	58.5	52.1	1.975	59.5	0.319
2001	3.8	234.2	19.1	59.0	50.8	2.032	58.2	0.312
2002	7.0	166.4	19.1	60.0	51.6	2.032	59.8	0.306
2003	3.1	106.4	19.0	59.3	49.5	2.114	58.8	0.310

- 1) 명목소득, 2000년 기준.
- 2) 명목소득, 2000년 기준. 1990년 이전은 인가건수, 최근 년은 분기별 누계치. '원래 비중×1만'으로 표기함.
- 3) 15세 이상 인구 중 군인·전투경찰·공익근무요원·형이 확정된 수감자·외국인 등은 제외. 2001년 이후는 인구주택총조사에 의거한 추계인구임.
- 4) 노동소득/GDP. 전 산업, 2000년 기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 5)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각 연도에서 측정. 강승복(2005)의 측정 결과 인용.

9) 소득분배를 대리하는 노동소득분배율, 지니계수는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독립변수는 아니라 사회구조적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논의하기 위해 제시했다. 한편, 기능적 분배로서의 노동소득분배율은 분배적 몫(distributive shares)으로서의 소득불평등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기능적 분배에 관한 이론은 생산요소의 수요곡선에 따른 가격이론에 근거하나, 분배의 몫은 총국민소득 중에서 각 계층집단이 얻게 되는 몫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Pen, 1971: 18).

2) 실증 분석

(1) 상관관계 분석

〈표 5〉는 독립변수들과 근로빈곤가구 규모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표 5〉 독립변수와 근로빈곤가구 규모와의 상관관계(N=23)

구 분	경제성장률	자본자유도	제조업 고용비중	고용률	임시·일용직 비중	국민 부담율	1998-2004년	노동소득 분배율	지니 계수
경제성장률									
자본자유도	-.356 [#] (.338/.188)								
제조업 고용비중	.452* (.328/.153)	-.598** (.457/-.055)							
고용률	-.146 (-.180/.297)	.140 (-.061/-.781*)	-.095 (.270/.155)						
임시·일용직 비중	-.167 (.280/.661)	.685* (.414/.453)	-.151 (.821***/-475)	.501* (.461 [#] /-.062)					
국민부담률	-.407 [#] (-.111/.242)	.751*** (-.182/-.156)	-.638** (.418/-.711 [#])	.500* (.731**/.290)	.772*** (.577*/.708 [#])				
1998-2004 (IMF 경제위기)	-.513* (.240)	.868*** (.228)	-.740*** (-.339)	.344 (-.657*)	.689*** (-.385)	.902*** (-.618*)			
노동소득 분배율	-.417* (-.180/-635)	.412 [#] (.028/-197)	-.198 (.271/.552)	.803*** (.909**/-175)	.582** (.492 [#] /-.956***)	.511* (.641*/-815*)	.494 [#]		
지니계수	.274 (.149/.265)	-.329 (-.016/-296)	-.028 (-.429 [#] /-.606 [#])	-.786*** (-.908***/.370)	-.606** (-.635* /-.632)	-.377 [#] (-.67*/.980**)	-.340	-.926*** (-.937***/-765)	
빈곤율	-.098 (.240/.213)	.283 (.228/-760*)	-.563*** (-.339/-350)	-.194 (-.657*/.584)	.100 (-.385/-048)	.332 (-.618*/.256)	.495*	-.121 (-.495 [#] /-.169)	.310 (.589*/.413)

* 빈곤율은 t(1982-2004) 연도, 1998-2004년 더미 변수를 제외한 독립변수는 t-1(1981-2003) 연도 기준임.

* () 안은 '(1982-1997년 기간의 상관관계/1998-2004년 기간의 상관관계)'임.

* *** p<0.001. ** p<0.01. * p<0.05. # p<0.1 (양쪽 검정)

첫째, 경제성장률은 근로빈곤층 규모 변화와 미미한 부적 관계(-.098)에 있었다. 이는 포드주의 기간까지를 포함시켰을 때 경제성장률과 빈곤 간의 상관관계가 미미한 수준이라는 외국의 연구(Brady, 2005)와 마찬가지로, IMF 경제위기 이전 시기에도 경제성장률은 근로빈곤층 규모 변화와 낮은 정적 상관관계(.240)를 보여 근로빈곤 감소는 경제성장의 직접적인 효과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IMF 경제위기 이후에도 역시 경제성장률은 근로빈곤층 규모 변화와 약한 정적 상관관계(.203)를 나타냈는데,

이는 포드주의 이후의 환경인 IMF 경제위기 이후에는 경제성장은 근로빈곤 완화와 직접 관련은 없는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Tobin, 1994; Culter and Katz, 1991). 한편, 경제성장률은 자본자유도(-.356, $p < .10$), 노동소득분배율(-.417, $p < .05$), 국민부담률(-.407, $p < .10$)과 유의한 부적 관계에 있고, 제조업 고용 비중(.482, $p < .05$)과는 유의한 정적 관계, 지니계수(.274)와는 약한 정적 관계에 있었다. 제조업 고용 비중과 경제성장의 밀접한 관계는 산업화에 기반을 둔 경제성장이 근로빈곤을 완화시키는 선순환 효과를 발생시켰음을 의미한다(김인철·민성환, 2003; Myles and Pierson, 2001).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노동소득분배율과 부적인 관계, 지니계수와는 정적인 관계에 있어,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간에는 U자(字)형 관계의 후반부에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성장률은 국민부담률과는 상충관계가 있어 경제가 성장할 때에는 국가복지가 후퇴하고 있었다.

둘째, 자본자유도는 근로빈곤층 규모 변화와 약한 정적 상관관계(.283)가 있었다. 그런데 IMF 경제위기 이전(.238)과 이후(-.760, $p < .05$)의 상관관계는 각기 달라, IMF 경제위기 이후에는 자본자유도가 증가하면 근로빈곤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자본자유도는 제조업 고용 비중(-.598, $p < .01$), 경제성장(-.356, $p < .05$)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 임시·일용직 비중(.685, $p < .05$)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이와 함께, IMF 경제위기 이후에는 자본자유도의 증가는 노동소득분배율(-.197)과 지니계수(-.296)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경제개방이 경제영역 및 경제적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외국의 연구결과(Alderson, 1999; Mishra, 1999: 79-108)를 뒷받침한다.

셋째, 제조업 고용 비중은 근로빈곤층 규모 변화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563, $p < .01$)가 있었다. 제조업 고용 비중이 증가하면 근로빈곤이 감소한다는 결과는 포드주의 시기(-.389)와 이후의 시기(-.350) 모두에서 산업화 수준이 근로빈곤 완화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Brady, 2005/2004; Moller et al., 2001; Alderson, 1999). 한편, 제조업 고용 비중은 경제성장(.482, $p < .05$)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자본자유도(-.598, $p < .01$), 국민부담률(-.638, $p < .01$)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우리나라 자본자유도 확대는 IMF 경제위기 이전(.457, $p < .01$)과는 달리 이후(.056)에는 산업화 수준과의 상관관계가 희박해져 탈산업화를 동반하는 경향이 있었다. 제조업 고용 비중과 국민부담률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711, $p < .01$)에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탈산업화와 국가복지 확대 추구는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의 동시기의 현상이다.

넷째, 고용률은 근로빈곤층 규모 변화와 미미한 부적 상관관계(-.194)에 있었다. 그런데 IMF 경제위기 이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657, $p < .05$)에 있었던 반면에, IMF 경제위기 이후에는 오히려 정적 상관관계(.584)로 변화했다. 즉, 고용 수준과 근로빈곤 간의 관계에 대한 외국의 연구(Norton, 2002)와 마찬가지로, IMF 경제위기 이전에는 고용률이 증가하면 근로빈곤이 감소하는 선순환관계에 있었다. 반면, IMF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고용률이 일시적으로 급락한 뒤 점차 회복돼 왔지만 같은 시기의 근로빈곤가구의 규모가 확대돼 왔음을 고려할 때, 하찮은 일자리(junk job)의 확대(재정경제부 외, 2004)에 기반을 둔 IMF 경제위기 이후의 고용 확대는 오히려 근로빈곤 증가를 동반해, 더 이상 선순환관계가 유효하지 않게 됐다. 한편, 고용률은 노동소득분배율(.803,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지니계수와는 유의한 부적 관계(-.786, $p < .001$)에 있었다. 시기별로는, IMF 경제위기 이전 시기(.270)에는 고용 확대가 어느 정도 제조업 성장에 기반을 두었고, 노동소득분배율 개선(.909,

$p<.001$) 및 지니계수 완화(-.635, $p<.05$)와 빈곤율 개선으로 이어져, 제조업 성장과 소득분배 개선을 통한 근로빈곤 완화의 선순환 관계가 존재했다. 반면, IMF 경제위기 이후에는 이전 시기와 같은 선순환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고용율과 제조업 고용 비중, 노동소득분배율, 지니계수와의 상관관계는 각각 .155, -.175, .370).

다섯째, 임시·일용직 비중은 근로빈곤층 규모 변화와 미미한 정적 상관관계(.100)에 있었다. IMF 경제위기 이전에는 부적 상관관계(-.385)에 있었는데, 이는 경제성장기에는 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최근보다 훨씬 적었다는 실증(전병유·김복순, 2005)을 뒷받침한다. 반면, IMF 경제위기 이후에는 이전 시기에 비해 상관관계(-.048)가 미미해져, 고용 형태별 임금 양극화를 동반하는 임시·일용직 증가는, 가구주 및 가구원의 취업에도 불구하고 이전 시기에 비해 빈곤 완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임시·일용직 비중은 자본자유도(.685, $p<.05$), 국민부담률(.511, $p<.05$)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임시·일용직 비중 증가는 자본자유도 증가의 경제영역에 대한 영향의 하나인 것으로 판단되고(IMF 경제위기 이전과 이후의 상관관계는 .414, .453), 노동시장 유연화와 국가복지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져 온 것은 최근의 상황과 관련이 있다(.577, $p<.05$, .708, $p<.01$).

여섯째, 국민부담률은 근로빈곤층 규모 변화와 약한 정적 상관관계(.332)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IMF 경제위기 이전에는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718($p<.05$)이어서 빈곤이 심화되면 오히려 국가복지 수준이 후퇴해 왔다. 반면, IMF 경제위기 이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256)를 보여, 근로빈곤 심화와 함께 국민부담률 또한 어느 정도 증가 경향을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부담률은 노동소득분배율과 전체 기간, IMF 경제위기 이전, 이후에 각각 .511($p<.05$), .641($p<.05$), -.815($p<.05$), 지니계수와는 -.377($p<.01$), -.677($p<.05$), .980($p<.01$)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IMF 경제위기 이전의 국가복지 수준이 매우 낮았던 점을 상기할 때, 이 시의 소득분배 개선은 경제성장에 따른 선순환의 결과이므로 복지정책의 효과라고 보기 힘들다. 반면, IMF 경제위기 이후에는, 복지지출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선순환 효과의 단절로 인해 소득분배가 악화돼 왔다.

일곱째, 1998-2004년(IMF 경제위기) 더미는 근로빈곤층 규모 변화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495, $p<.05$)가 있었다. 이는 포드주의 이후의 시기에 근로빈곤이 확대돼 온 외국(Smeeding, 2005)의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실증하는 결과이다. 한편, 1998-2004년(IMF 경제위기) 더미는 자본자유도(.868, $p<.001$), 임시·일용직 비중(.689, $p<.001$), 노동소득분배율(.494, $p<.05$), 국민부담률(.902,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경제성장률(-.513, $p<.05$), 제조업 고용 비중(-.740, $p<.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IMF 경제위기 이전의 포드주의 성장기에는 경제성장의 선순환관계가 존재했지만, 이후에는 이전과는 다른 거시경제 환경, 노동시장, 분배제도의 구조화돼 선순환관계가 단절되고 있다. 경제의 저성장, 자본자유도 증가로 인한 경제개방, 탈산업화가 현저하다. 노동시장 유연화가 현격히 확대돼 왔다. 한편, 국민부담률의 확대가 이루어졌고, 국가복지 및 고용 수준의 회복은 IMF 경제위기 전후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노동소득분배율을 어느 정도 만회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여섯째, 소득분배 변수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근로빈곤층 규모 변화와 미미한 부적 상관관계(-.121), 지니계수는 약한 정적 상관관계(.310)에 있었다. 근로빈곤가구의 규모가 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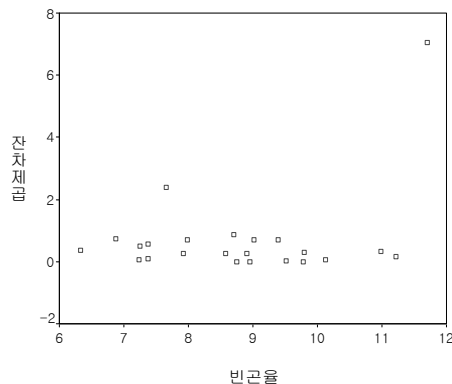
소해 왔던 경제성장기에는 노동소득분배율이 개선되면 근로빈곤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선순환관계가 존재했다(-.495, $p < .01$). 반면, IMF 경제위기 이후에는 노동소득분배율과 빈곤율의 부적 상관관계는 미미한 수준(-.169)으로 약화되고 있다. 이는 분배와 빈곤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Volscho, 2004; Alderson, 1999)과 마찬가지로, 소득분배 상황이 악화돼 선순환관계가 단절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경제성장률은 노동소득분배율 및 지니계수와 각각 -.417($p < .05$), -.180, -.635 및 .274, .149, .265, 고용율은 각각 .803($p < .001$), .909($p < .001$), -.175 및 -.786($p < .001$), -.908($p < .001$), .370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IMF 경제위기 이전 시기에는 경제성장률과 고용율 증가는 소득분배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못하나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이후의 시기에는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고 소득불평등도 심화시키고 있다. 즉 경제의 선순환 관계가 존재했던 이전 시기와는 달리, 최근에는 경제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선순환관계가 단절되고 있는 것이다.

(2) 다중회귀분석

t년도의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차수는 t-1년도를 채택했다. log 모형, double log - 역함수 모형, Box-Cox 변환 등에 대한 모의실험을 해 본 결과 모형의 우수성이 확보되지는 않았다. 특히, 음(-)의 수치를 갖는 경제성장률 변수의 속성 때문에 독립변수 변환 시 역(逆)함수 모형을 설정할 수밖에 없어 회귀계수의 해석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또, 회귀모형이 선형성 가정을 충족시키고 대부분의 변수가 AR(0)인 것으로 나타나, 오차수정모형의 적용도 효용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따라서 원 회귀모형을 투입해 분석했다.

다중 회귀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회귀모형은 모형적합도, 선형성 가정 등을 충족시켰다. 자기상관을 탐지한 결과, 더빈-왓슨(Dubin-Watson) 값은 미결영역이었으나 LM 검증 결과 또한 자기상관 부재의 영가설($\rho = 0$)이 채택됐다. 일부 변수가 분산팽창계수(VIF) 값이 10을 넘어 다중공선성이 의심됐지만, 상태지수는 다중공선성 발생이 유의하지 않은 수준이었다. 이분산성 검증에 투입되는 변수가 많아 공차한계에 도달해 화이트(White)의 이분산성 검증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잔차의 제곱(e_i^2)과 종속변수에 대한 산점도¹⁰⁾를 분석한 결과, 이분산성은 크지 않았다.

10) 잔차의 잔차의 제곱항(e_i^2)과 종속변수 간의 산점도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표 6〉 사회구조적 요인과 근로빈곤가구 규모 간의 회귀분석 결과(N=23)

구분	B	β	t	유의확률	VIF ¹⁾	상태지수 ¹⁾
경제성장률	.306	.340	1.760 [#]	.099	1.534	1.832
자본자유도	-.929	-1.032	-2.666*	.018	6.163	2.045
제조업 고용비중	-.545	-.606	-1.558	.140	6.222	2.293
고용률	-.470	-.522	-2.462*	.026	1.851	2.855
임시·일용직 비중	.398	.442	.982	.342	8.324	5.130
국민부담률	-.403	-.448	-.890	.388	10.437	8.869
1998-2004년 (IMF 경제위기)	1.224	1.360	2.253*	.040	14.990	9.189
상수	8.758		40.121***	.000		
모형적합도	R^2 : .636 $adj R^2$: .465 F : 3.737*					
d / LM χ^2	2.323(df=7) / 1.280(df=6)					
White χ^2 ²⁾	-					

1)은 변수 표준화 방법 적용.

2)는 WLS 적용.

* *** p<0.001. ** p<0.01. * p<0.05. # p<0.1 (양쪽 검정)

첫째, 경제성장률은 회귀계수가 .306(p<.1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근로빈곤층 규모 변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장이 직접적으로 근로빈곤 완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오히려 경제성장은 근로빈곤의 확대를 낳는 요인이었다. 이는 포드주의 확립부터 최근까지의 성장과 빈곤 완화 간의 선형 관계가 부재하다는 외국의 연구(Brady, 2005)와 일치한다. IMF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전체 기간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장 우선론자들의 통념과는 달리 포드주의 성장기도 우리나라에는 성장과 탈빈곤 간의 단순 선형관계는 유지돼 오지 않았고, IMF 경제위기 이후의 경제성장은 근로빈곤층 규모 변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초반 이후 미국형의 시장 경제 모델을 급속히 도입했고, IMF 경제위기는 이와 같은 경제구조를 확립하는 결정적인 계기였는데(국민경제자문회의, 2005), 그 결과 경제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수준을 악화시키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저부가가치산업인 정보통신산업의 급속한 성장 및 취업유발계수 감소(한국은행, 2004), 서비스업 비중 증가 및 노동생산성 부족(송위진·김병윤·김왕동·박재민·배용호·임미정·이춘근·최지선·황석원, 2004), 전체 산업의 음(-)의 성장-고용탄성치(elasticity of employment)(이내황·하준경·강태수·임철재, 2005), 일자리 양극화 심화(재정경제부 외, 2004) 같은 성장의 질 악화와 관련이 있다.

둘째, 자본자유도는 회귀계수가 -.929(p<.05)로 나타나, 근로빈곤층 규모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실증 결과는, 앵글로색슨형 모델로 클럽 수렴하거나 하향수렴가설이 적용될 것이라는 통념과는 다른 것이다. 그런데, 앞서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따르면, 자본자유도 증가는 경제성장의 후퇴, 탈산업화, 노동시장 유연화, 소득분배 및 소득불평등 악화를 동반해 경제영역, 경제적 조절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상반된 결과는 IMF

경제위기의 일시적인 영향으로 단기간에 급격히 확대된 뒤 축소되고 있는 경제개방의 이질적인 영향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본자유도의 변화가 근로빈곤층 규모 변화 및 경제영역, 경제적 조절, 사회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관찰과 이에 따른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제조업 고용 비중이 미치는 영향은 회귀계수가 -0.545 (p -value $.140$)이었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제조업 고용 비중은 상관관계 분석에서 근로빈곤층 규모 변화와 유의한 부적 상관성이 있는 유일한 사회구조적 요인이었고, 이와 같은 관계는 IMF 이전 시기 및 이후 시기 모두에서 일관된 경향을 나타냈다. 회귀분석 결과도, 유의한 수준은 못됐지만, 부적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산업화 수준이 근로빈곤을 통제하는 강력한 힘이라는 여러 연구들의 실증(Brady, 2005/2004; Møller et al., 2001)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제조업 고용 비중은 근로빈곤층 규모를 축소시켰던 요인으로 간주된다. 이와 같은 결과에는 외국에서와 마찬가지로(Baldwin et al., 2001) 제조업에 기반을 둔 포드주의적 성장이 그 선순환 효과로 인해 근로자계층의 탈빈곤의 원동력이 됐음을 의미한다. 포드주의 이후의 환경에서도, 제조업 고용이 빈곤 완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실증분석 결과가 보고됐는데(Alderson, 1999),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의 제조업 고용 비중은 일관된 감소 추세를 나타내지는 않고 있어 외국에 비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이는 1996년 이후 해외 직접투자가 정체돼 제조업 공동화 수준(hollowing out)이 낮은 데에도 기인한다(하병기, 2005). 따라서 IMF 경제위기 이후에도 제조업 고용 비중은 여전히 근로빈곤의 확대를 억제하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고용률은 회귀계수가 -0.470 ($p < .05$)으로, 근로빈곤층 규모 변화에 유의하게 부적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의 고용 증가는 근로빈곤을 완화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는 포드주의 성장기의 영향이다. 포드주의 황금기 동안의 서구에서와 같이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가 확대돼 온 것이다. 외국의 연구(Alam, Murthi, Yemtsov, Murrugarra, Dudwick, Hamilton and Tiongson, 2005: 79-104; Iceland, 2003)에 의하면, 포드주의 성장기의 고용 확대는 근로자계층의 빈곤완화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요인이었다. 그런데, 앞서 상관관계 분석에서 확인했듯이, IMF 경제위기 이후에도 이와 같은 선순환 관계가 성립되는가는 회의적이다. 급락했던 고용률이 다시 증가하고 있지만 근로빈곤층의 규모는 줄지 않고 반대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최근의 하찮은 일자리(junk job) 확대와 관련이 있다(재정경제부 외, 2004). 외국의 연구(Acemoglu, 2002)에 의하면, 일자리의 질 악화는 불평등 확대뿐 아니라 빈곤 수준 확대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즉, 고용 수준 확대가 근로빈곤 완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포드주의 성장기와 IMF 경제위기 이전 시기에 국한됐고, 최근에 고용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근로빈곤 또한 확대되는 현상에서 알 수 있듯이, 고용률의 증가는 근로빈곤 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임시·일용직 비중은 회귀계수는 $.398$ (p -value $.342$)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고 유의확률도 낮은 수준이어서, 전체 기간의 근로빈곤층 규모 변화 간에 의미 있는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IMF 경제위기 이전에는 임시·일용직 비중과 근로빈곤 간에는 의미 있는 인과관계가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이 시기의 임시·일용직과 상용직 간에는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심화되지 않았다는 실증(전병유·김복순, 2005)과도 관련이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6년

부터 노동시장 유연화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이전 시기에 비해 고용 형태 간 임금소득의 양극화가 확대돼 왔는데, 본 연구의 상관분석뿐 아니라, 외국의 경험을 통해 보면 임시·일용직 비중 확대는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한다(Danziger and Gottschalk, 1995). 그런데, 임시·일용직 비중 확대가 근로빈곤을 확대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지는 못했다. 이는 최근 임시·일용직 비중과 고용형태별 임금소득의 양극화가 증가해 왔지만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을 모두 포함한 전체 피용인의 임금소득의 양극화 또한 증가해 왔고(전병유·김복순, 2005), 가구주 및 가구 내 부가노동자의 임시·일용직 취업은 전체 가구 소득을 증가시켜 임시·일용직 취업과 근로빈곤 간의 인과관계를 유효하지 않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임시·일용직 비중이 근로빈곤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전체 피용인 및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임금소득의 이산(dispersion) 정도, 가구 내 취업자 수와 가구 전체 소득 간의 관계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여섯째, 국민부담률은 회귀계수는 $-403(p\text{-value } .388)$ 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을 뿐 아니라 유의확률도 낮은 수준이어서, 근로빈곤층 규모 변화와는 의미 있는 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서구의 연구에 의하면 복지제도의 확대는 빈곤을 완화하는 유효한 수단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 포드주의 성장기 동안 특수직역연금 등 상류층과 중간층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분배정책에만 치우쳐 공적 복지를 등한시 해 왔다. 따라서 상관관계 분석에서 확인했듯이, 이 시기의 근로빈곤 감소는 국가복지의 영향이 아니라 포드주의 성장의 선순환 효과 때문이었다. 반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제도적 복지를 확충해 왔지만, 여전히 근로빈곤 완화에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선행 연구(Jacobs, 2000)에 의하면, 1996년 현재 우리나라 공적 이전소득의 지니계수는 0.987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또, 최근의 연구(김진욱, 2004)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회보장기여는 계층간 역진적 분배효과를 낳고, 특히 연금급여의 경우 고소득층에 주로 분배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최근 확대되기 시작한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구조(정액급여, 소득연계 보편적 급여, 자산조사형 프로그램) 및 관대함의 수준이 근로빈곤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 총량적인 규모와 근로빈곤층의 수혜규모나 비율과는 관계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여덟째, 1998-2004년(IMF 경제위기) 더미는 회귀계수가 1.224($p < .05$)로 나타나, 근로빈곤층 규모 변화에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IMF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1998년에 6.36%로 상승한 뒤 1999년에 5.50%로 일시적으로 하락했으나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최근의 근로빈곤 확대는 IMF 경제위기로 인한 일시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이를 계기로 포드주의의 위기가 확산되고 경제성숙단계에 진입해 포드주의 이후의 현상이 확대돼 미국식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산물임을 의미한다. 경기변동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향 때문이 아니라, 포드주의 이후의 사회구조적 변화의 영향으로 경제의 선순환 관계가 단절되고 근로빈곤이 구조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의 결과가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성장은 직접적으로 근로빈곤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포드주의 성장기에는, 경제성장은 산업화, 고용 확대, 노동소득분배 개선으로 이어지고, 이들 요인들은 낙리효과(trickle down effect)에 의해 근로빈곤을 완화하는 선순환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포드주의 이후의 시기에는 경제성장이 산업화, 고용 확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축소됐고, 노동소득분배 악화와 관련이 있었다. 이로 인해 직접적으로 근로빈곤층 규모가 확대돼 온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간에 U자(宇)형 전환의 시기에 도달함으로써, 경제구조가 악화돼 경제성장으로 인한 선순환 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고, 이제는 경제성장 그 자체보다는 경제구조가 더 중요함을 의미한다.

둘째, 본 연구가 우리의 성장모델에 주는 의미는 미국식 자본주의 모델을 급속히 도입한 뒤의 사회적 성취는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우리 사회 주류의 통념과는 달리, 포드주의 이후의 환경에서, 우리가 추구해 온 성장모델은 근로빈곤 완화에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성장만능론은 구조적인 빈곤을 극복하는데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성장의 신화(神話)에 대한 자유주의적 기대가 근거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성찰이 필요하다. 는 점을 제시해 준다.

셋째, 사회복지지출(국민부담률)은 근로빈곤을 완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외국의 연구들과는 상반된 극히 한국적인 현상이다. 그런 점에서 사회복지 확대에 대한 우리 사회 일부의 우려는 과장된 것이다. 따라서 이제 구조화 되는 근로빈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층적이고 유기적인 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일자리 양극화 해소, 고용 가능성 제고 같은 중층적이고 유기적인 적극적 노동시장이 1차 안전망으로 기능해야 하고, 사회적 예방조치로서 보편적 수당제도, 사회적 서비스, 사회보험 같은 보편적 사회복지제도의 내실화, 사후적 조치로서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수준 현실화를 위한 노력이 경주돼야 한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가 우리나라 사회경제시스템에 제기하는 궁극적인 화두는 무엇인가? 실증결과, 최근 미국식 자본주의 모델을 도입한 결과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고용의 질이 후퇴하고 근로빈곤이 확대돼 왔음이 입증됐고, 제도 간 비정합성이 표출돼 사회경제적 지속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생산레짐과 자본주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에 의하면 포드주의 조정양식의 경로의존성에 따라 포드주의 이후의 조정양식에도 차이가 있고 이는 소득불평등 정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데, 앵글로색슨 모델은 성과가 열등하다. 특히 제도 간의 정합성이 높을수록 효율성과 사회경제적 성취가 높다(Hall and Ginerrich, 2004, Amable, 2003). 그런 점에서 이제 혁신, 거시경제, 노동시장, 분배영역 등에 있어서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모델로 전환을 모색해 고임금→기술혁신과 산업구조의 고도화→생산성 향상→고임금과 고복지→유효수요 창출로 이어지는 고진로(高進路, high road)(조영철, 2001: 307)의 안정

적이고 지속가능한 모델을 구현해야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사회구조적 요인 중 통화·금융제도, 기업제도 등의 경제제도의 영향, 인구변화 등 사회적 영향, 정치제도의 영향 등에 대한 검토는 배제됐다. 둘째, 표본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1970년대에 대해서는 연구할 수 없었고,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포드주의 이후의 모델을 별도로 만들 수 없었다. 따라서 1998-2004년(IMF 경제위기) 더미를 변수로 투입해 이전 기간과의 변화를 실증하고, 추세분석, 상관분석을 통해 보충적으로 논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실증은 각 시기에 대해 인과관계를 엄밀하게 검증하는 수준은 못된다.

참고문헌

- 강승복. 2005. “우리나라 임금소득불평등도의 중장기적 변화”. 『노동리뷰』 11: 19-29.
- 국민경제자문회의. 2005. 『한국형 경제발전 모델의 변천과 새로운 모색』.
- 김두섭·강남준. 2000. 『회귀분석: 기초와 응용』. 서울: 나남출판.
- 김수행 역. 1993. 『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 Armstrong P., A. Glyn and J. Harrison, 1991. *Capitalism Since 1945*. 서울: 동아출판사.
- 김연형. 2001. 『시계열예측』. 서울: 형설출판사.
- 김유선. 2005. “한국의 노동, 과거 현재 미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창립 기념 심포지엄 발표자료.
- 김인철·민성환. 2003. 『우리나라 제조업 양극화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
- 김정식·이강복. 2001. “한국의 자본축적구조 재편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14(4): 95-109.
- 김진욱. 2004. “한국 소득이전 제도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0: 171-195.
- 김혜선·김태일. 2004. “세계화에 따른 복지국가 레짐별 노동시장 정책의 변화”. 한국정책학회 정기학술 세미나 발표자료.
- 남준우·이한식. 2002. 『계량경제학: 이론과 응용』. 서울: 홍문사.
- 노대명·최승아. 2004. 『한국 근로빈곤층의 소득·고용실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송위진·김병운·김왕동·박재민·배용호·임미정·이춘근·최지선·황석원. 2004. 『새로운 국가혁신 체제구축방안에 대한 연구』.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제출 보고서.
- 심상용. 2005. “과거 성장전략의 경로의존성과 혁신주도 동반성장의 과제에 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4(3): 223-248.
- 이내황·하준경·강태수·임철재. 2005. “경제양극화의 원인과 정책과제”. 『금융경제연구』 184:1-60.
- 이재은·신현중·윤경준·이우권 역. 『비교방법론』. 2002. Ragin C. C. 2002. *The Comparative Method: Moving Beyon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trategies*. 서울: 대영문화사.
- 이정우·황성현. 1998. “한국의 분배문제: 현황, 문제점과 정책방향”. 『KDI 정책연구』 20(1/2): 153-230.
- 이중원·이상돈. 1996. 『RAS를 이용한 계량경제분석』. 중판. 서울: 박영사.
- 이혁구·박시중 역. 2002.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위기: 지구적 사회정책을 향하여』. Mishra R. 1999. *Globalization and the Welfare State*.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재정경제부·보건복지부·노동부·기획예산처·반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4.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

- 전병유·김복순. 2005. "노동시장 양극화와 정책과제: 고용 양극화를 중심으로". 『노동리뷰』 7월: 36-51.
- 조영철. 2001. "세계화와 사회민주적 대안의 조건". 전창환·조영철 편. 『미국식 자본주의와 사회민주적 대안』. 서울: 당대. pp. 297-320.
- 하병기. 2005. 『제조업 공동화론의 논의 내용 및 평가』. 산업연구원.
- 한국은행. 2004. 『경제양극화의 원인과 정책과제』.
- 한진희·최경수·김동석·임경목. 2002.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 2003-2012』. 한국개발연구원.
- 황덕순. 2005. "절대빈곤을 추계와 실태".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사회 릴레이 토론회 발표자료.
- Acemoglu D. 2002. "Cross-Country Inequality Trends". *LIS Working Paper No. 296*.
- Aghion P., E. Caroli and C. Garcia-Penalosa 1999. "Inequality and Economic Growth: The Perspective of the New Growth Theori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7:1615-1660.
- Alam A., M. Murthi, R. Yemtsov, E. Murrugarra, N. Dudwick, E. Hamilton and E. Tiongson. 2005. *Growth, Poverty and Inequality: Eastern Europe and the Former Soviet Union*.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Alderson A. S. 1999. "Explaining De-industrialization: Globalization, Failure, or Succe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4: 701-721.
- Amable B. 2003. *The Diversity of Modern Capitalism*. Oxford: Oxford Univ. Press.
- Atkinson A. B. 1975. *An Economics of Inequality*. Oxford: Oxford Univ. Press.
- _____. 1998. *Poverty in Europe*. New York: Blackwell.
- Bäckman O. 2005. "Welfare State, Social Structure and the Dynamics of Poverty Rates: A Comparative Study of 16 Countries, 1980-2000." *LIS Working Paper No. 408*.
- Baldwin R., P. Martin and G. I. P. Ottaviano. 2001. "Global Income Divergence, Trade, and deinternalization: the Geography of Growth Take-Offs." *Journal of Economic Growth* 6(1): 5-37.
- Barro R. J. 1991. "Economic Growth in a Cross Section of Countri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6: 407-443.
- Bassanini A., S. Scarpetta and P. Hemmings. 2001. "Economic Growth: The Role of Policies and Institutions. Panel Data Evidence from OECD Countri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283*.
- Baumol W. J., S. A. Blackman and E. N. Wolf. 1985. "Unbalanced Growth Revisited: Asymptotic and New Evidence." *American Economic Review* 75: 806-817.
- Beck N. and J. Katz. 1995. "What to do (and not to do) with Time-series Cross-section Data."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9(3): 634-649.
- Benbaou R. 1996. "Inequality and Growth." *NEER Working Paper* 5658.
- Blank R. M. 2000. "Fighting Poverty: Lessons from Recent U.S. History." *Journal of Economic Review* 88: 348-351.
- Blank R. M. and A. S. Blinder. 1986. "Macroeconomics,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pp. 180-208. in *Fighting Poverty: What Works and What Doesn't*. edited by Danziger H. and D. H. Weinberg.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 Bowles P. and B. Wagman B. 1997. "Globalization and the Welfare State: Four Hypothesis and Some Empirical Evidence." *Eastern Economic Journal* 23(3): 317-334.
- Brady D. 2004. "The Welfare State and Relative Poverty in rich Western Democracies, 1967-1999." *LIS Working Paper* No. 390.
- _____. 2005. "Structural Theory and Relative Poverty in Rich Western Democracies, 1969-2000." *LIS Working Paper* No. 407.
- Brandt N., J-M. Burniaux and R. Duval. 2005. "Assessing the OECD Jobs Strategy: Past Development and Reforms." *Economic Department Working Paper* No. 429(ECO/WKP(2005) 16).
- Cancian M. and D. Reed. 2001. Changes in Family Structure: Implications for Poverty and Related Policy. pp. 69-96. in *Understanding Poverty*, edited by Danziger S. H. and R. H. Haveman R. H.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Culter D. M. and L. F. Katz. 1991. "Macroeconomic Performance and the Disadvantaged." pp. 1-16. in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Vol. 2, edited by Brainard W. C. and G. L. Perr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 Danziger S. H. and P. Gottschalk. 1995. *American Unequal*.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De Beer P., C. Vrooman. and J. M. W. Schut. 2001. "Measuring Welfare State Performance: Three or Two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LIS Working Paper* No. 276.
- DiNitto D. M. and T. R. Dye. 1995. *Social Welfare: Politics and Public Policy*. 4th ed. New York: Printice-Hall.
- Ellwood D. T. and L. Summers. 1986. "Poverty in America: Is Welfare the Answer or the Problem." pp. 78-105. in *Fighting Poverty : What Works and What Doesn't*, edited by Danziger H. and D. H. Weinberg.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Förster M. F. and M. Pearson. 2002.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the OECD Area: Trend and Driving Forces." *OECD Economic Studies* #34. Paris: OECD.
- Hall P. A. and D. W. Ginerrich. 2004. "Varieties of Capitalism and 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 in the Macroeconomy: An Empirical Analysis." *MPIFG Discussion Paper* 04/5.
- Haveman R. and J. Schwabish. 1999. "Macroeconomic Performance and the Poverty Rate: A Return to Normalcy." *Discussion Paper* No. 1187-99. 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 Madison: The Univ. of Wisconsin.
- Hicks A. M. 1994. "Introduction to Pooling." pp. 169-188. in *The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of The Welfare State*, edited by Janoski T. and A. M. Hick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ber E. and J. D. Stephens. 2001. *Development and Crisis of the Welfare State: Parties and Politics in the Global Market*. Chicago and London: The Univ. Chicago Press.
- Iceland J. 2003. "Why Poverty Remains High: The Role of Income Growth, Economic

- Inequality and Changes in Family Structure. 1949-1999." *Demography* 40(3): 499-519.
- Iverson T. and A. Wren. 1998. "Equality, Employment and Budgetary Restraint: The Trilemma of the Service Economy." *World Politics* 50(July): 507-546.
- Jacobs D. 2000. "Low Inequality with Low Redistribution? An Analysis of Income Distribution in Japan, South Korea and Thailand Compared to Britain." *Casepaper* 33. Centre for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London School of Economics.
- Kenworthy L. 1999. "Do Social-Welfare Policies Reduce Poverty? A Cross-National Assessment." *Social Forces* 77(3): 1119-1139.
- Klein B. and P. Ronces. 1989. "A Profile of the Working Poor." *Monthly Labor Review* 112(10): 3-11.
- Korpi W. & Palme J. 1998.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and Strategies of Equality: Welfare State Institutions, Inequality, and Poverty in Western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 661-687.
- Krugman P. 1996. *Pop Internationalism*. Cambridge: MIT Press.
- Kuznets S. 1966. *Modern Economic Growth*.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 Mathews J. 1989. *Tools of Change: New Technology and The Democraticisation of Work*. Sydney: Pluto Press.
- Moller S., D. Bradley, E. Huber, F. Nielsen and J. D. Stephens. 2001. "The State and Poverty Alleviation in Advanced Capitalist Democracies." *LIS Working Paper* No. 278.
- Myles J. and P. Pierson. 2001. "The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of Pension Reform." pp. 305-333. in *The New Politics of the Welfare State*. edited by Pierson P.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Nielsen F. 1994. "Income Inequality and Industrial Development: Dualism Revisite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9: 654-677.
- Norton S. W. 2002. "Economic Growth and Poverty: In Search of Trickle-Down". *Cato Journal* 22(2): 263-275.
- Notermans T. 1995. "Social Democracy and External Constrains." *ARENA Working Paper* No. 15.
- O'Connor A. 2001. *Poverty Knowledge: Social Science, Social Policy, and the Poor in Twentieth Century U.S.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 O'Connor A. 2001. *Poverty Knowledge: Social Science, Social Policy, and the Poor in Twentieth Century U. S.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 Oman C. 1994. *Globalization and Regionalization: The Challenge for Developing Countries*. Paris: OECD.
- Pen J. 1971. *Income Distribution*. New York: Praeger Publishers.
- Pierson P. 2001. "Post-Industrial Pressures on the Mature Welfare State." pp. 80-104. in *The New Politics of the Welfare State*. edited by Pierson P.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lümper T., P. Manow and V. Troeger. 2005. "Pooled Data Analysis in the

-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of the Welfare State: A Note on Methodology and Theory."
- http://www.mpi-fg-koeln.mpg.de/pob/Dok/Beck_ka7.pdf.
- Pryor F. 2004. "Market Economic Systems." *LIS Working Paper* No. 404.
- Ritakallio V-M. 2001. Trends of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in Cross-National Comparison. *LIS Working Paper* No. 272.
- Rodric D. 1997. "Has Globalization Gone too Far?"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_____. 2000. "How Far Will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Go?"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 14(1): 177-186.
- Rowthorn R. and J. W. Ramaswamy. 1997. "Deindustrialization: Causes and Implications." *IMF Working Paper* 42.
- _____. 1998. "Growth, Trade and Deindustrialization." *IMF Working Paper* 60.
- Rowthorn R. and J. Well, 1987. *Deindustrialization and Foreign Trad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meeding T. M. 2005. "Poor People in Rich Nations: the United Stat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LIS Working Paper* No. 419.
- Sonis M. 1996. "Sources of Structural Change in Input-output System: A Field of Influence Approach." *Economic Systems Research* 8: 15-32.
- Suh Sang-Mok and Yeon Ha-Cheong. 1986. "Social Welfare during the Structural Adjustment Period in Korea." *Working Paper* 8604. Seoul: Korea Development Institute.
- Tobin J. 1994. "Poverty in Relation to Macroeconomic Trends, Cycles, and Politics." pp.147-167. in *Confronting Poverty: Prescriptions for Change*. edited by Danziger G. D. et al.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Volscho Jr. T. W. 2004. "Income Distribution in 14 OECD Nations, 1967-2000: Evidence from the Luxembourg Income Study." *LIS Working Paper* No. 386.
- Watts R. J. and A. L. Porte. 1997. "Innovation Forecasting."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An International Journal* 56(1): 25-47.

An Empirical Study on the Socio-Structural Causes of Working
Poor in Korea(1982-2004) :
Verification of the Effect of Macro-Economy, Labor Market, Distribution
System on the Poor of Labor Households

Sim, Sang-Yong
(Catholic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empirically the socio-structural causes of working poor. This study used raw data of <The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of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from 1982 to 2004, and put in operation time serie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use socio-economic factors of macro-economy environment, labor market, distribution system. Contrary to assertion of growth-concentrated people, economic growth rate has had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the change of working poor size. In the growth period there has been trickle down effect of economic growth, but in the post-Fordism period there has not been valid circular relation. Recent introduction of the U. S. type capitalism resulted in negative phenomenon like aggravation of income distribution, deterioration of employment quality, enlargement of working poor. And there rise a question on socio-economic durability due to de-compensation on intra-institution. It is necessary to grope transition to the high road social market model - that is stable and sustainable - correspond to Korea that is stable and sustainable.

Key Words : working poor, macro-economic environment, labor market, distribution system. IMF economic crisis.

[논문접수일 2006. 8. 1. 게재확정일 2006. 10. 12.]